

1950~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정책과 생활세계*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부교수)

전동명(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졸업)

1. 머리말

급속한 전후 복구와 고속성장으로 요약되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는 ‘북한건설’의 모든 신화가 담겨 있다. 북한 체제의 발전상을 과시하듯 폐허 속에서 세워진 고층건물과 살림집, 인민대중의 해방과 혁명성을 대표하는 광장과 각종 구조물, 유럽풍으로 구획되고 정리된 시가지의 이국적인 풍경,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신화적 담론에 기록된 삽화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화는 억압된 진실이며 윤색된 현실이기 마련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웅장하게 세워진 고층건물이 사람을 들이지 못하고, 혁명적인 속도로 부설된 철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은 ‘붉은 신화’의 이면에 얽여진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이 시기에 건설된 공장, 주택, 철도, 병원 등 북한 체제의 물리적 토대는 성장의 신화와 위기의

* 이 글을 읽고 꼼꼼하게 논평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심사자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란다.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글은 신화와 현실, 성장과 위기가 공존하는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에 주목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장과 위기가 사회주의공간에 투영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 사회주의공간의 형성과 작동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장과 위기, 신화와 현실로 분리된 북한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1954년부터 1960년대 중반은 북한에서 전후복구건설과 함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지던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북한 사회주의공간의 원형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체제의 성공과 위기의 계기들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공간에 투영되었다.

북한 사회주의공간의 이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공간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첫째, 물리적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공간은 체제의 정치경제적 성장과 위기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공간이 특정한 정치경제적 기획의 주도 아래 편성되거나 건설되는 물리적 기반임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공간은 인민대중의 삶이 영위되는 장(場), 즉 생활세계의 조건 혹은 결과가 된다. 이는 공간이 인민대중의 물질적 삶을 규정하지만, 동시에 인민대중의 복잡한 삶을 경유해야만 구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세계는 비가시적이며 물리적 측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세계는 물리적 조건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물리적 기획으로서 공간은 행위주체들로 구성된 이면의 공간과 상호작용해야 비로소 실제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의 접목은 공간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구상 아래 2절에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공간의 양

면성,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기획의 속성과 생활세계의 속성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정치경제적 기획의 측면에서 1954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정책과 기본건설을 조명 하겠다. 이 절에서는 이 시기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도시화의 일반적 인 특징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기본건설의 일반적 특징과 철도·주택 부문의 기본건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치경제적 기획의 측면에서 기본건설은 북한 공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본건설 개별 부문 인 철도와 주택은 각각 재화의 유통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책임지는 물 리적 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북한식 공간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4절에서는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실제 기본건설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정권의 기획이 추진한 ‘계획적·의도적 정책’과 인민대중의 ‘비계획적·비의도적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조명하겠다. 이를 통해 정권의 정치경제적 기획과 인민대중의 삶이 충돌해서 빚어내는 북한 공간의 단면, 즉 정부의 계획에 맞춰 건설된 주택이 폐허처럼 덩그러니 서있게 되는 현실을 살펴보겠다.

2. 사회주의공간의 양면성: 기획의 공간과 생활세계

1) 기획의 공간: 생산, 안보,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도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대규모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당했고 빈민굴에서 최소한의 생을 유지해야 했다. 자본의 욕망과 무정부성으로 직조된 세계는 사회적 관계를 해체했고, 절대 다수의 인

간은 소외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철저하게 자본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의 작동에 복무하는 (대)도시 건설과 도시재개발을 비판했다. 그들은 대안으로 도·농이 통합되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구상했다.¹⁾ 그들이 기획한 공간은 공간적으로는 도·농 간 차별과 착취가 없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공동소유의 실현으로 계급 착취와 소외가 사라진 곳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착취와 갈등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공간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이상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침에는 김을 매고, 점심에는 공장 일을 하며, 저녁에는 시를 쓸 것이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중·소규모의 자급자족적 공동생활체(commune)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안을 뒤쫓은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혁명가들은 ‘자본의 공간’을 대신할 ‘인간의 공간’을 건설하고자 했다. 자본의 순환체계가 집중·집적된 자본주의적 대도시는 상품의 공간으로 간주되어, 배척과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대도시 성장은 공식적으로 제한되었고, 도시화된 농촌과 농촌화된 도시, 즉 도·농이 통합된 중소규모 단위공간의 형성이 권장되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간정책은 “대도시의 크기 축소, 대도시 성장 억제, 중소 규모 마을의 형성, 도시경제의 자력갱생 추진, 새로운 마을의 창조 등”²⁾의 과제에 주력했다.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이념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회주의공간정책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공간이 지향했던 분업과 집중의 형태를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적 혹은 전원적이라 할 수 있는 전(前)자본주의 공동체의 부활을 꿈꾸는 복고적 태도도 거부했다. 그것은 전자본주의

1)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본주의도시공간에 대한 비판은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서울: 보성각, 1998); Andy Merrifield, 남청수 외 역,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서울: 시울, 2005) 참조.

2) Dean Forbes and Nigel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p. 10.

공간과 자본주의공간을 대체할 실현가능한 대안이자,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었다. 그것은 도시도 시골도 아니고, 또한 분할되지 않으면서도 다극으로 구성된 생산적 통합체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공간질서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공간은 고도의 사회주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발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 산업화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 지식을 동등한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단위공간에 분산시키고, 사회주의공간의 평등성을 구체화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었다.³⁾ 일국 단위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중소기업으로 분할된 단위공간의 균형발전으로 공간적 평등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공간기획의 이상은 그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현실세계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사이에는 체제경쟁이 벌어졌으며, 체제경쟁하에서 안보강화와 경제성장은 체제경쟁의 가장 핵심적 영역이자 목표였다. 체제경쟁에서의 승패는 체제생존의 문제였고, 현실사회주의 체제는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안보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목표는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전략, 이른바 스탈린식 산업화전략으로 수렴되었다. 사회주의공간정책이 이념적 차원에서 이상으로 내걸었던 ‘인간의 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안보의 공간’으로, ‘생산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스탈린식 산업화전략은 대규모 자본축적과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는 (대)도시 형성, 즉 도시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당연히 그 핵심 논리는 사회주의 산업화전략에 맞추어 진행

3) *Ibid.*, p. 9.

4) Gyorgy Enyedi, "Urbanization under Socialism," Gregory Andrusz, Michael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p. 102.

되었다.⁵⁾ (대)도시 건설과정에서 비생산적 고정자본의 투자, 구체적으로 주거·문화·의료·교육·운수 관련 시설의 건설·배치는 스탈린식 산업화전략의 관점에서 조정되었다. 사회간접자본 및 편의시설 등 건조환경⁶⁾은 비생산적 분야로 분류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고, 그렇게 절약된 혹은 축적된 투자는 생산적인 중공업 건설로 이전되었다.⁷⁾ 그 결과 교통망과 주거환경을 비롯한 도시공간의 각종 사회기반 시설은 ‘저개발’되었다.⁸⁾ 사회주의정권은 일부 도시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한다는 구실로 비생산적 기본건설에 대한 투자의 최소화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방식의 공간편성은 과소도시화(under-urbanization) 현상으로 이어졌다. 켈레니(I. Szelenyi)에 따르면, 과소도시화는 급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도시화, 다시 말해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산업화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에 따르면 급속한 사회주의 산업화는 도시공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였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도로 등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탈린식 산업화전략이 낳은 불균형성장 속에서 도시공간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⁹⁾

-
- 5) Ivan Szelenyi, “Cities under Socialism — and After,” *Ibid.*, pp. 288 ~ 291.
- 6) 하비(David Harvey)에 따르면,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고정자본이 생산을 위한 물리적 틀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조환경은 자본의 생산을 위한 물리적 틀일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통과 소비를 위한 물리적 틀, 즉 사회간접자본과 소비기금을 포괄한다. 건조환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David Harvey, 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서울: 한울, 1995); 김양배, “도시의 자본순환과 건조환경이론,”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의 정치경제학』(서울: 아카넷, 2000).
-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71 ~ 180;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 p. 14.
- 8) Ivan Szelenyi, *Urban Inequalities under State Socialism*(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24.

이러한 과소도시화 현상은 사회주의공간이 체제의 성장과 위기의 변증법적 계기였음을 환기시켜 준다. 스탈린식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정권은 과소도시화 현상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부족의 공간’¹⁰⁾은 중공업성장의 투자를 제공하는 ‘성장(혹은 축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의 규모를 물리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는 중소규모 단위공간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려고 했던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공간기획과도 부합했다. 그러나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경제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부족의 공간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저개발’된 사회기반시설은 거대한 계획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급속한 공업화가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력을 기존의 사회주의공간은 공급할 수 없었다. 과거의 성장의 공간은 위기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9) 자본주의 체제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산업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력은 넘쳤지만, 일자리는 항상 부족했다. 민지오니는 켈레니가 개념화한 사회주의 ‘과소도시화(under-urbanization)’ 현상을 서구의 자본주의 도시화를 기준으로 삼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켈레니는 ‘과소도시화’ 개념이 산업화와 도시화 사이의 관계에서 도시화의 특징을 도출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라 반박했다. I. Szelenyi, “Cities under Socialism — and After,” pp. 294 ~ 299; Enzo Mingione, “The Urban Question in Socialist Developing Countries,”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 p. 28.

10) ‘부족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코르나이가 사회주의경제의 특징을 지칭하며 사용했던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라는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코르나이는 경제체계가 네 가지 현상을 겪을 때 ‘부족의 경제’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부족현상이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반적(general)이다. 둘째, 부족현상이 예외적이지 않고 빈번하게(frequent) 발생한다. 셋째, 부족현상이 경제과정의 결과와 특징, 그리고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과 행위자들에게 강력한(intensive) 영향력을 발휘한다. 넷째,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chronic)이다. 사회주의공간에서 비생산적 건조환경의 부족현상도 이러한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233 ~ 234.

시작했다. 현실사회주의 체제는 자신의 발전을 담보하는 성장의 공간과 함께 위기의 공간도 동시에 구축하였던 것이다.¹¹⁾

현실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중소규모 단위공간 중심의 공간편성¹²⁾은 도시규모를 제한한 과소도시화 현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제형성 초기부터 추진되었던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안보기획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그것은 소규모 공동생활체의 외관에 근접했고, 안보적 측면에서 유사시 즉각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진지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소도시화 현상의 발생 이전부터 추진된 기획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소도시화는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추구했던 이데올로기와 안보기획의 공동결과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와 산업화, 그리고 냉전체제가 낳은 안보의 기획은 과소도시화를 매개로 뫼비우스의 띠

11) 과소도시화 현상을 이해·설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전략 이외의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 개별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발생한 과소도시화의 시·공간적 맥락은 상이하였으며, 공간편성은 언제나 당면한 역사적 실천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민지오니에 따르면 사회주의공간에는 자연조건, 전통적 사회문화, 과거부터 내려오는 정치·경제·사회적 과제 등과 같은 전 사회주의적 조건 및 유산,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건설과 체제경쟁, 고속성장 등과 같은 현실사회주의 체제 고유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민지오니의 지적처럼 후진사회주의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최소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문제, 즉 먹는 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했다. Enzo Mingione, "The Urban Question in Socialist Developing Countries," pp. 27~52.

12) 사회주의공간이 도·농이 통합된 중소규모의 도시공간을 지향한다고 해서, '비도시적'이라거나, '대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어디까지나 과소도시화는 자본주의 도시화에 비교한 상대적 개념이다. 자본주의공간과 같이 사회주의공간도 기본적으로 공업 및 도시 중심적이며, 공간구조 또한 소수 대도시 — 정부가 주력하는 산업이 밀집된 지역 — 의 과도한 성장과 대다수 중소도시의 저성장과 같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사회주의공간은 사회경제체제의 속성 때문에, 도시화의 속도 및 규모,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의 정도가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이러한 공간문제를 은폐하는 차원에서, 중소규모의 도시공간(혹은 단위공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동생활체적 공간의 내용이 현실사회주의 체제에서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안보의 공간’이었다. 현실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과 안보의 논리는 사회주의공간의 이상과 교묘하게 공명하며 사회주의공간을 창조, 아니 날조했다.

2) 생활세계: 복종과 저항

공간은 정책집행의 장소, 곧 정책의 물리적 조건 및 대상이자, 삶을 사는 인민대중의 생활세계이다.¹³⁾ 공간은 ‘역사적 존재’로서 과거와 소통하며 현재를 변화시킨다. 자연조건과 그것으로부터 유래하는 인민대중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습속(habitus)은 완고하고 은근하며, 어떤 점에서는 직접적이다. 물론 우리는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규정력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인민대중의 삶이 영위되는 물리적 조건으로서 공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정권의 의도이자 계획적 정책이며, 권력과 관료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간을 통제하는 지배적인 주체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권력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세계의 일상에 대한 연구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제도주의적 연구 몇몇이 증명했듯이,¹⁴⁾ 권력의 의지와 정책은 하부

13)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삶의 형태이며, 그 세계는 ‘당연시’되면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시’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 행태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고 있지 못하였던 ‘실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세계는 바로 모든 이론과 실천이 지향되는 곳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 생활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살며,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생산한다. 일상생활은 너무나 ‘진부하고, 사소한 것’들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수적이다.”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서울: 한울, 2000), 82쪽.

14) 예를 들면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관료적 자

에서 진행되는 관료와 인민대중의 소통과 담합을 통해서 왜곡되고 변화된다. 인간의 삶은 권력의 의도대로 명확하게 구획되고 조정되지 않는다. 관료체계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의지와 정책은 인민대중의 은근하고 간접적인 저항에 부딪힌 현장 관료의 즉흥적인 흥정과 타협의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조정된다. 여기서 왜곡의 특권은 관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 인민대중 역시 최소의 저항과 불만표출을 통해서 정책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킨다. 사회주의일상에 대한 연구는 억압적인 스탈린주의 정권 시기에도 인민대중의 수동적인, 때로는 적극적인 저항이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결정론에 대한 적절한 반증일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삶에 대한 조명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대중은 들랄(Guy Delisle)의 묘사처럼 태엽인형이 아니다.¹⁵⁾ 권력의 관료체제와 대면한 인민대중은 전체주의적 의도와 정책에 맞서 때로는 적극적이고 때로는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전략을 통해 권력의 전체주의적 시도를 좌절시킨다. 비올라(Lynne Viola)의 지적은 ‘권력의 지배’ 문제가 정치적 위계구조를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통념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문제는 복잡적이다. 관리와 열성분자들, 그리고 농민 자신들이 마을정치(village politics)라는 망에 깊숙이 빠져있고, 그래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치학의 문제를 계급정치와 집단화의 더 큰 배경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¹⁶⁾ 권력의 지배와 관련된 공식적인 모든 문제는 인

원배분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을 단위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논의로는 Boleslaw Domanski,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Connecticut: Praeger, 1997) 참조.

15) Guy Delisle, 이승재, 『평양』(서울: 문학세계사, 2004).

16) Lynne Viola, “Popular Resistance in the Stalinist 1930s: Soliloquy of a Devil’s Advocate,” Lynne Viola, ed., *Contending with Stalin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23.

민대중의 일상생활을 경유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유의 과정에서 관료-인민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권력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이해관계는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갈등은 관료-인민대중 사이의 흥정과 타협으로 해결된다.

공산당 간부의 시각에서 중국 농촌이 경험한 정치·경제의 시대적 변화상을 인류학적으로 기술한 황수민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¹⁷⁾ 황수민의 연구는 제한된 공간이동, 사회주의 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존재한 토착주민과 토착관료 사이의 인격적 관계, 전통문화와 이를 경유해야만 하는 국가정책, 대중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충돌의 과정을 묘사한다. 그는 권력의 의지와 정책이 마을이라는 일상적 공간에 투영되어 인민대중과 상호 작용해서 변화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공간단위의 실상이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애초 기획했던 사회주의공간과는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중국의 공장 내 노동관계를 분석한 왈더(Andrew G. Walder)의 연구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¹⁸⁾ 왈더에 따르면, 중국에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사회정치적 종속은 단순히 공식적인 권력관계 혹은 국가정책의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리자에 대한 정치적 종속과 상위자에 대한 인격적 종속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의 형성과 함께 진행된다. 노동자의 종속은 단순히 복종의 범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의식적인 무관심, 게으름, 태업, 기회주의 등과 같은 수동적인 저항행위도 포함된다.

17) 물론 황수민의 연구는 사회주의 농촌 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를 비롯한 사회주의 공간 일반에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황수민 저, 양영균 역, 『린 마을 이야기』(서울: 이산, 2003).

18)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도만스키의 지적처럼 정책소통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관료가 인민대중과의 힘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¹⁹⁾ 인민대중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일상에 대한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인민대중과 하부의 관료체계가 빚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저항과 마찰은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저항과 복종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배회하는 인민대중의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일 역시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저항을 개념적 용어로 정의하기보다는 ‘저항행위들 또는 저항들’²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민대중이 이러한 형태의 ‘저항들’을 통해 사회주의공간, 곧 권력의 공간을 건설하는 과정을 교묘하게 방해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적공간을 보호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간을 둘러싼 관료체계와 인민대중의 지배와 타협의 이중주는 사회주의공간의 생활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활세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공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통념으로 다가오는 북한의 모습을 다른 시각에서 보려는 것이다. 이는 체제의 흥망이 추동한 물리적 경관의 변화를 감내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적하는 일이다. 정치경제적 전변 속에서 자신들에게 강제되는 공간의 구성·건설과정을 살아가는 인민대중의 삶을 포착하려는 시도, 일상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각종 선전·선동 용어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인민대중의 생활상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조성된 공간의 이면에서 비의도적·비계획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세계의 복잡한 삶의 그물망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19) Boleslaw Domanski,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 p. 33.

20) Lynne Viola, “Popular Resistance in the Stalinist 1930s,” p. 43.

3. 1950~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공간정책과 기본건설

1) 북한의 산업화와 과소도시화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해방 이후 이룩한 대부분의 성과를 잃었다. 전후 북한은 3개년계획(1954~1956년)으로 전전(戰前)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고, 5개년계획(1957~1960년)으로 인민대중의 기본적인 의식주문제 해결과 공업화 기초구축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했다. 양적지표와 정책의 성과만을 볼 때, 전후 복구건설(1954~1960년) 시기 북한 지도부는 인민대중의 최소 생계수준 보장, 혁명의 공고화, 초기 공업화의 동시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고속성장은 농·경공업 잉여의 중공업으로의 강행적 이전, 대중운동에 기초한 노력경쟁, 다양한 절약제도의 강요 등 내부원천을 착취하는 속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외연적 성장방식의 한계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고, 축적의 원천과 성장의 동력은 위기의 토양이 되었다. 더욱이 대외관계의 악화로 인한 사회주의 국제분업체계의 단절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주창은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켰다. 5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에도 불구하고, 1960년이 완충기로 설정된 사실은 스탈린식 강행적 축적과 외연적 성장전략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7개년계획은 고속성장의 위기와 모순이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한편으로 권력의 정치경제적 지도·지배력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경제관리체계 조정 등의 일련의 제도적 조치로 북한식 사회주의는 제도화 단계에 이르고,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경제성장률은 정체되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다. 북한 지도부는 7개년계획 초기,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냉전과

한반도 분단구조는 이러한 정책시도를 과거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중심의 더욱 극단적인 중공업성장정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외연적 성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지만, 내포적 성장 역시 요원한 일이었다. 과거의 성장 동력은 정체와 지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제도화되어 감에 따라, 성장은 지체되기 시작했다. 7개년계획의 3년 연장은 북한 체제가 직면한 모순과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정권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어 갈수록, 고속 성장하던 경제는 몰락의 단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정치·경제체계의 성장-정착-몰락의 계기들이 역동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한복판에서 북한의 공간은 형성되었다. 생산, 정치, 안보의 측면에서 사회주의공간을 이해할 때, 권력의 정치적 입지와 군사적 안보가 강화될수록 생산은 약화되어 갔다.

전후 복구건설기(1954~1960년)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의 공간편성, 즉 도시화(urbanization)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자원체계의 공간적 집중·집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²¹⁾ 북한 역시 도시화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화는 몇 가지 점에서 북한 정권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족한 경지면적과 노동력의 조건에 전쟁은 농토의 황폐화와 농촌노동력의 절대부족이라는 상황을 더했고, 이는 ‘먹는 문제’를 압박했다. 최소한의 농업 생산량을 담보할 수 있는 농촌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노동력의 도시유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²²⁾ 둘째, 중공업성장의 투자

21) R. J. Johnston, D. Gregory, D. M. Smith, 한국지리연구회 역, 『현대인문지리학사전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1986』(서울: 한울, 1992), 108~109쪽 참조.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비생산적 건조환경의 문제 역시 도시화의 부담이었다. 거대한 인구규모를 감당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도시공간에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²³⁾ 셋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공간은 ‘중소규모 단위공간의 균형 발전’의 테제로 도·농 간, 지역 간 평등을 지향했다. 이 때문에 정당성의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도·농 간의 차별 현상은 정권에게 부담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다. 넷째, 대도시로의 자원집중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 유사시 전시생산과 폭격을 염두에 둘 때, 전국적으로 분포된 중소규모의 자립적 경제공간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잊지 못하는 북한 지도부에게 이 문제는 중요했고, 이러한 고려 때문에 수송이 불편한 산기슭에 기계공업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다.²⁴⁾ 그러나 북한이 지향한 자립적 경제구조의 실현, 즉 거대한 규모의 중공업 산업화를 지탱하기 위해서 도시화는 기본적인 과제였다. 이는 북한식 산업화와 정치적 안보, 그리고 도시화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달려있었고, 결국 북한식 과소도시화 현상으로 해결되었다.

과소도시화 현상에 대한 북한의 논리는 ‘생산력배치원칙’으로 종합

22) 농번기가 되면 농촌 인구의 도시 노동자들이 ‘농촌지원사업’에 나서는 북한의 현실은 정권이 처했던 ‘도시화의 딜레마’의 단면을 보여준다. 김일성,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며 건설에 대한 지도 체계를 고칠데 대하여(196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70).

23) 이와 관련해서 김일성의 담화는 북한 지도부가 비생산적 건조환경의 저개발, 농토부족으로 제한된 농업생산 등의 현실적 문제를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공간 테제와 어떻게 조합시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 “국도관리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 『김일성저작집』, 18권(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82), 172~173쪽.

24)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 대하여(1953),” 『김일성저작집』, 8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9쪽 인용.

되었다. 이는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장·기업소를 원료 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킨다. 둘째, 생산력배치에서 경제 부문들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줄인다. 넷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다섯째, 국방력을 강화한다. 북한은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저마다 독자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전일적인 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원칙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 즉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의 노선과 방침, 경제·국방건설의 병진노선과도 일치한다.²⁵⁾ 그러나 이는 북한식 과소도시화의 현상을 생산과 안보의 관점에서 종합한 논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간단히 평가하자면, 이는 북한 체제의 출발점에서 고안된 정치경제적 기획과 북한 체제가 직면했던 역사적 과제가 조합되어 탄생한 북한의 공간편성지침이다.²⁶⁾ ‘생산력배치원칙’에서 교통, 통신 등의 사회 기반시설 저개발과 주택부족 등의 문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해 수송거리를 줄이거나, 도시 같은 농촌과 농촌 같은 도시 건설 등의 기형적 방식으로 해결된다. 또한 그것은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 즉 ‘자립적 민족경제’와 체제생존을 위한 진지 구축, 즉 ‘전 국토의 요새화’ 논리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반(反)자본주의적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사회주의공간의 이상으로 선언된다. 특히 자급자족적 자력갱생형 중소규모 공동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즉 북한이 강조하는 ‘시·군’ 중심의 경제·지역적 균형발전의 논리는 북한공간의 전반적인

25) 김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탁월한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26)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동명, “북한의 체제와 공간의 정치경제(1954~1970)”(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65~71쪽 참조.

‘저개발’, 즉 과소도시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

2) 기본건설의 일반적 특성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공간의 과소도시화 현상은 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의 건조환경이 저개발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식 과소도시화 현상 역시 사회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의 개발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문제를 ‘기본건설’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²⁷⁾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건설은 사람이 노동도구를 사용하여 자연을 개조하며, 여러 가지 자재를 가공하여 생산적 및 비생산적 용도의 건설물²⁸⁾을 생산하는 중요한 물질적 생산 부문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건조환경이 자본순환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라 고정자본, 사회간접자본, 소비기금 등으로 구분된다면, 북한의 건조환경이라 할 수 있는 기본건설은 건설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로 구분된다. 생산적 건설에는 공업, 농업, 운수, 체신, 상업 등 사회급양망이, 비생산적 건설에는 주택, 교육기관, 문화기관, 과학연구기관, 보건기관, 공공건설 등이 포함된다. 대략적으로 전자는 산업과, 후

27) 하비(David Harvey)의 표현을 빌린다면, ‘기본건설’은 건물의 형태로 공간에 고착된 자본, 즉 ‘건조환경’의 건설을 의미하며, 공간편성과과정의 핵심이다. ‘기본건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의 글, 72~84쪽 참조.

28) 북측은 ‘건설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민경제에서 고정재산으로 리용할 목적으로 건설공업이 생산한 물질적 부. 건설물이 다른 생산부문들의 생산물과 구별되는 특성은 그것이 기능할 장소에 고착된다는데 있다. 건설물은 건물 및 구축물과 그것들의 개별적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건물은 경제적 용도에 따라 크게 공장, 기업소와 같은 생산적 건물과 주택을 비롯한 비생산적 건물로 나누인다. 구축물에는 도로, 다리, 굴뚝, 물땀크, 용광로 같은 것이 들어간다. 조립설비는 건설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1970), 40쪽 ‘건설물’ 참조.

자는 인민대중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의 과정과 결과는 북한 체제의 지향을 물리적으로 보여준다.

전후 북한의 기본건설은 경제의 고속성장과 안보강화라는 발전전략 아래 수행되었고, 그 핵심은 외연적 성장방식에 기초한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였다. 이는 기본건설 부문에서 생산적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생산적 고정재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질적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물질적 부의 확대재생산이 빨라지며 기술발전수준이 높아진다. 사회적 확대재생산의 속도는 생산적 고정재산의 규모와 이용 정도에 의존한다. 생산적 고정재산은 비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하여 규제적 혹은 규정적 역할을 하며, 비생산적 고정재산의 성장은 생산적 고정재산의 성장에 의존한다. 사회주의에서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과 관련된 생산적 고정재산과 비생산적 고정재산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건설투자는 생산적 기본건설에 선행적으로 집중된다. 결국 기본건설투자의 우선순위와 투자비중은 비생산적 건설에 비하여 생산적 건설에, 경공업에 비하여 기간적 중공업에 집중된다.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기본생산시설들과 중요건설대상, 그리고 기본투자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대상들에 자재, 자금,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돌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고속성장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다.²⁹⁾

담론의 차원에서 북한의 기본건설과 관련한 정책노선은 고정자본과 생산적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적 기본건설과 소비기금과 소비적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생산적 기본건설 사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있다.³⁰⁾ 그러나 기본건설의 실제 투자는 생산적 건설부문에 집중되었다. 전후 기본건설투자의 실제 구성비는 생산

29) 위의 책, 42, 117쪽.

30) 『로동신문』 1954년 5월 20일, 2면, “박철, 기본건설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표 1> 국가기본건설투자의 구성비(1954~1960)

(단위: %)

구성비 년도	총 국가기본건설투자(100 %)										
	생산적 건설		비생산적 건설		생산적 건설				비생산적 건설		
	비율	증가 율	비율	증가 율	중공업	경공업	운수 체신	농촌 경제	주택	보건	교육 문화
1954	70.8	-	29.2	-	35.0	8.2	20.0	6.4	10.6	1.3	8.3
1956	73.0	-12.6	27.0	-2.0	44.6	9.0	7.9	10.5	-	1.2	1.8
1957	75.0	5.7	26.9	2.6	49.2	9.0	-	-	-	-	-
1959	74.0	39.8	26.0	38.1	40.8	9.2	9.0	13.2	11.3	2.7	3.8
1960	68.2	-15.7	31.8	11.9	37.0	8.9	7.4	12.3	15.1	2.2	6.2
1961	80.0	22.7	20.0	-34.2	40.5	17.6	7.0	12.7	8.9	0.9	3.8
1962	73.0	0.0	27.0	48.0	35.5	20.3	6.1	10.6	16.9	-	4.0
1963	78.0	12.8	22.0	-14.0	38.2	17.8	-	15.8	-	-	-
1964	84.0	18.7	16.0	-19.9	48.0	17.0	-	23.4	-	-	-
1965	-	-	-	-	-	-	8.3	13.2	6.0	1.3	2.5

자료: 연도별 『조선중앙년감』(통일원, 1996), 144~154쪽; 투자증가율에 대한 지표는 이영훈 (2000), 62, 80쪽 참조.

적 건설의 투자집중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산적 건설은 대체로 총 기본건설투자에서 3/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 기본건설투자에서 중공업 부문의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압도적이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는 전체 기본건설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다. 경제 부문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완충기로 설정되었던 1960년 경공업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며,³¹⁾ 경제·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장선에서 균의 역할 강화와 지방산업공장의 확대조치가 1차 7개년계획 초반에 추진된 결과 1963

31) 리종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 실행총화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 1권 (서울: 국토통일원, 1988), 798쪽.

~1964년 농촌에 대한 기본건설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³²⁾ 그러나 경제·국방건설병진노선의 추진이라는 기초하에 기본건설투자는 다시 중공업건설로 집중된다.

북한 경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생산적 건설로의 투자집중, 그중에서도 중공업건설로의 투자집중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문제는 생산적 건설, 그중에서도 중공업건설에 집중된 투자가 다른 건설 부문의 투자를 잠식한 또는 희생시킨 결과이다.

3) 철도와 주택의 건설

여기서는 철도와 주택 부문의 기본건설을 살펴봄으로써 기본건설 부문의 불균형투자가 초래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려 한다.³³⁾ 철도와 주택은 생산과정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기본건설부문이다. 철도는 단위공간 사이의 물리적 연결망으로서 자원 공급의 전국토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계획경제의 작동을 보장하는 가장 주요한 공간적 시설이다. 북한 스스로도 철도를 ‘인민 경제의 혈맥’³⁴⁾에 비유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택(소구역)

32) 김일성,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332쪽.

33) 자세한 논의는 진동명, “북한의 체제와 공간의 정치경제(1954~1970),” 89~112쪽 참조.

34) 1953년 운수형태별 비중은 여객수송의 경우 철도가 95.4%, 자동차 4.2%, 하천·해상 0.4%이고,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가 95.9%, 자동차가 3.1%, 하천·해상이 0.5%이다. 운수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역할을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운수 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철도운수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을 것이다.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통일원: 서울, 1996), 452~453쪽 참조. 북한의 교통운수 전반에 대한 개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국토개발연구원: 서울, 1992), 377~433쪽.

역시 사회주의공간의 최소주거단위로서 인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여건, 정권이 기획한 생산과 지배의 미시적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 공간이다. 즉, 주택은 인민대중의 기본적인 복지수준과 권력의 개입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간적 척도이다. 무엇보다 주택은 노동력 재생산의 물리적 기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산업화와 관련된 철도, 인민대중의 삶과 관련된 주택에 대한 분석은, 천리마처럼 화려하게 세워진 북한공간의 이면을 산업과 삶의 양 측면에서 들춰낸다. 이 두 부문은 북한의 공간이 생산과 안보의 논리로 조정되어 북한식 과소도시화 현상과 맞물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철도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후 복구건설 초기 당면한 수송문제의 해결과 해외원조의 존재는 많은 투자를 철도건설로 이끌었다. 그러나 해외원조의 급감과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전략 때문에 철도건설의 투자는 급감하게 된다. 5개년계획 이후 북한의 철도는 자원절약과 기존 철도이용률의 최대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되었다. 불가피하게 철도 부설이 필요한 경우, 자력갱생·돌격대식의 대중동원으로 투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하며 방대한 기본건설투자를 동시에 요구하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련의 제한성’³⁵⁾을 가진 철도건설의 문제를 꿰뚫어보듯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철도부문의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적 이용은 기존의 건조환경(철도)을 계속해서 감가 상각시킬 뿐이었다. 결국 북한의 철도는 양·질적인 측면에서 저개발되었다. 이렇게 개발이 지체된 철도는 수송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계획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입니다.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여러

35) 과학원 지리학연구소,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322쪽.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³⁶⁾할 수 없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당시 북한 경제에서 수송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잘 보여준다. 저개발된 철도로 인한 긴장된 수송문제에 직면해서, 북한 지도부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³⁷⁾ 그들은 공장기업소를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근접 배치함으로써 수송문제를 최소화하려 했다. 소규모 지역으로 제한된 생산-소비의 자급자족공간은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건조환경의 중요성을 그만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철도 노선의 50%가 3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이라는 사실³⁸⁾과 1960년 초반부터 강조된 지역적 자급자족공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이 신설한 19개 노선 중 30km 미만의 노선은 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0km 미만의 노선은 이미 일제에 의해서 부설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의 지역적 자급자족공간이 식민지 철도체계의 편파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북한 지도부가 지향한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공간은 어느 정도 식민지 철도체계의 유산을 고려한 포석이다. 중소기업우선성장의 투자재원 마련 등의 요구 앞에서, 북한 지도부는 이미 존재하던 철도체계를 이용 가능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투자재원의 압박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이미 존재하는 철도체계를 활용하여 철도건설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절약된 부문을 중소기업건설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식민지 철도가 남겨놓은 단거리 노선 중심의 철도는 사회주의공간 테제가 날조하고 있는 지역적 자급자족공간을 형성하는 문제와도 일치했다. 한편으로 이는 안보상의

36) 위의 책, 321쪽.

37) 지도부는 기술적 측면에서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의 전기화, 광궤화, 중량화를 시도했다.

38) 전체 60개 노선 중 100km가 넘는 노선은 10개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392쪽.

문제로 내륙산간지대에 입지한 공업시설의 공간적 배치와도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북한 철도의 이러한 특징은 전후 북한의 거시적인 발전전략(경제의 고속성장파 안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적 순환체계로 기능하는 철도는 전체 철도의 98%가 단선인 상황에서 국토 차원의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체 인민경제 차원에서 ‘긴장된 수송문제’는 계속되었다.

결국 북한에서 지역적으로 분업화된 생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망의 부실은 자급자족적 지역공간을 강조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국토차원의 균형을 담보하지 않는다. 저개발된 북한의 철도망은 ‘자급자족적 지역공간’을 ‘균형 발전된 국토’로 연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집단주거단위로서 북한 정권이 추진한 주택소구역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보통 북한의 대도시와 중도시는 주택구역 및 주택소구역으로 구성되며, 소도시인 읍 및 노동자구에서는 주택소구역으로 구성된다. 주택소구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소의 단위공간이다. 주택소구역의 생활단위체계와 시설배치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 일상적인 생활문화공간을 위치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중후반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조치가 있었다. 첫째, 1967년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 아래층에 신문도서열람실, 아동도서관 등의 사상교양공간이 건설되었다. 둘째, 주택소구역 내에 경공업공장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주택 아래층에 배치되었다. 평양, 함흥, 청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주택(혹은 살림집)지구에 경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지구에 경공업공장을 배치함으로써 출퇴근 교통이 훨씬 편리해지고 ‘가두노력’을 생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북측은 이 두 가지 조치의 결과 “살림집지구, 살림집소 구역은 인민들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는 곳일 뿐 아니라 사상 문화교양장소로 되었으며 휴식과 소비만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이 진행되는 곳”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³⁹⁾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담론과 강요된 생산이 인민대중의 최소 생활공간단위에 노골적으로 침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택은 더 이상 노동과 정치를 관망하는 여가의 공간, 삶의 쉼터가 아니었다. 주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조차 생산과 지배의 논리가 강제하고 압박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 중후반 하강하는 경제와 강화되는 권력은 인민대중의 생활공간에 깊숙이 침범해 들어왔다.

<표 1>이 보여주듯이, 주택건설은 비생산적 건설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이다. 공업 부문 기본건설을 제외한 여타 생산적 건설부문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된 부문이다. 전쟁 시기의 폭격으로 도시의 70~80% 정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전후 복구건설과정에서 주거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집중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주거문제는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여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택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주택문제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⁴⁰⁾ 게다가 주택건설은 지도부의 입장에서 복지향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생산적 건조환경이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된 많은 주택은 국가의 투자가 아닌 주민들의 자력갱생으로 지어졌고, 건설된 주택의 질은 형편없었다. 전후 복구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문제는 시급했으나, 지도부는 산

39) 리화선, 『조선건축사』 3권(서울: 발인, 1993), 42쪽 참조.

40)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권, 553쪽, ‘주택문제’ 참조.

업화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산업화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립시주택’ 건설을 권장했지만, 이마저도 건설의 선후차에서 뒤로 밀렸다. 전쟁의 기억은 인민대중에게 ‘립시주택’의 생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적 근거가 되었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계속해서 낙후된 생활조건을 강요할 수 없었지만,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본격화되어 가고 해외원조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비생산적 건설, 특히 주택부문 건설투자에 대한 절약 역시 불가피하였다. 김일성은 주택건설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조립식 건설은 노동력과 강재, 목재 등의 건재를 절약하고, 건물을 일정한 규격대로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측의 설명에 따르면, “1956년 1월에 조립식건설의 전반적 실현단계”⁴¹⁾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립식 방법은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도입되었지만, 주택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조립식 주택건설이 다른 부문에 비해 두드러지는 이유는 북한 지도부가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강재, 목재 등의 건재를 절약해 산업건설 부문으로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4분에 한 세대씩 건설한다는 ‘평양속도’의 신화는 바로 이러한 조립식 건설에 기초하고 있었다.

북한 체제가 ‘질’의 희생 속에서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평양속도’가 창출한 주택의 질 역시 형편없었다. 새로 지은 주택이 기울어져 벽을 기둥으로 받치고, 복구된 철도청사 지붕이 내려앉았으며, 신설된 중학교나 주택 등이 비바람에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였다.⁴²⁾ 이러한

41)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권, 44쪽, ‘건설의 공업화’ 참조.

42) 『로동신문』 1953년 11월 21일, 1면, “기본건설에서 날립식 시공을 근절하라!”; 『로동신문』 1954년 9월 15일, 2면, “새로 지은 주택들이 왜 허물어지는가 — 경공업성 제2건설 트레스트 사업에서” 참조.

‘날림식 공사’에 대해 김일성 역시 신랄하게 비판했다.⁴³⁾ 당지도부는 기술부문 일꾼 사이의 당적지도와 군중노선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날림식 공사’의 근본 원인은 생산적 건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건재의 무분별한 절약과 속도를 강조한 자력갱생식 주택건설을 강요한 지도부의 정책에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지도부는 설계의 표준화, 건설 부재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건설방침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투자에 근거한 질적 발전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투자와 자력갱생식의 주택건설은 주택의 질은커녕 양을 담보하는 데도 무리가 따랐다.⁴⁵⁾ 체제경쟁이 강요한 고속성장의 목표 아래 인민대중의 생활조건은 희생되었고, 이는 주택건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⁴⁶⁾

4. 기본건설의 생활세계: 일상의 합리성과 수동적 저항

이 절에서는 북한의 수기나 『로동신문』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단편을 재구성해, 실제 기본건설 현장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한다. 이를 통

43) 김일성,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62),” 『김일성저작집』 16권(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332쪽;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부서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한 연설(1969),” 『김일성저작집』 24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24쪽 참조.

44)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의 현실 역시 ‘질’의 문제를 외면하는 데에 한몫을 했다.

45) 조현식, “북한의 주택현황,” 『월간 북한』 9월호(서울: 북한연구소, 1990), 167쪽.

46) 주택부문의 기본건설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진동명, “북한의 체제와 공간의 정치경제(1954~1970),” 99~112쪽 참조.

해 정권이 계획·의도한 공간의 이면에 가려진 인민대중의 비의도적·비 계획적 일상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건설노동자였던 리명원의 수기를 중심으로, 『로동신문』에 실린 몇몇 사례를 엮어서 서술할 것이다.⁴⁷⁾

리명원의 수기⁴⁸⁾는 북한 지도부가 강요한 ‘높은 속도’와 ‘혁명적 열의’가 전후 복구건설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설작업의 기계화, 조립화 등의 문제를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이는 복구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관료와 인민대중, 노동자와 열성분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단면뿐만 아니라, 정권의 독특한 해결책 역시 보여준다. 물론 정권의 그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동일한 문제가 김일성을 입을 빌려 거듭해서 제기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리명원 수기는 정권이 홍보한 ‘높은 속도’에 대조되는 ‘낮은 속도’의 건설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전후 북한에서 복구건설은 ‘평양속도’로 대표될 만큼 빠른 속도로 많은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북측의 공식문헌은 이 과정이 어려웠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런데 리명원이 서술하는 건설현장의 모습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47) 북한의 수기는 시대의 이데올로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은 정치적 시선이 개입된 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수기에 실린 다양한 일화에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인민대중의 복잡한 감정의 편린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수기가 일종의 ‘노동 오디세이’지만, 주인공이 노동여정에서 겪게 되는 난관과 그것의 극복과정에는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비록 단편적이지만, 개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접체험에 기초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48)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 수기』(평양: 민청출판사, 1961).

는 먼저 전후 주택부족의 심각성을 목격할 수 있다.⁴⁹⁾ 전쟁의 참담함을 목격하고 주택복구의 절절한 필요성을 자각한 리명원의 다짐은 이 데올로기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지도부에게도 주택을 무엇보다 ‘빠르게’ 복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건설의 기계화와 조립식 건설, 그리고 대중운동은 필수적이였다. 이는 자원절약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건설방식이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특히 숙련된 기능공들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았다.⁵⁰⁾ 그녀는 기계화, 조립식 건설, ‘1인 1세대 미장’ 등의 대중적 노력운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종파주의, 보수주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평가이기도 하다.

과연 그녀의 이러한 평가는 정당한 것일까. 정부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고, 주어진 작업량은 막대한 상황에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 당에서 요구하는 기계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실제 현장의 기계화는 노동도구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평하는 것이 적당할 정도의 도구개량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자재를 수월하게 옮기도록 도와주는 ‘자동밀차’⁵¹⁾ 같은 노동도구의 개량은 작업을 수월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이 요구한 만큼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생산성의 질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수준의 ‘기계’는 아니다. 고단한 노동주체의 입장에서 손쉬운 도구개량을 빌미로 훨씬 많은 작업량을 할당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현장 노동자의 수동적 저항은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49) 위의 책, 23~24쪽 발췌 인용.

50) 『로동신문』 1957년 11월 9일, 2면, “기본건설에서 전변을 위하여 일군들의 관점과 작품을 바로잡자, 평양시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서을현”;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 수기』, 54, 75, 124~132쪽.

51) 『로동신문』 1958년 10월 17일, 3면, “<오체르크> 자동밀차.”

열성적인 노동자로서, 또한 당원이자 작업반장으로서 리명원은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합리성을 ‘○○주의’의 잣대로 재단해 버렸다. 일상의 합리성은 이데올로기적 반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데올로기적 반동이란 일상의 합리성이든, 그러한 행위는 건설계획의 실패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권은 평양속도라고까지 칭하며, 주택건설의 높은 속도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의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⁵²⁾

실제로 기본건설에서 정권의 무리한 계획할당과 인민대중의 수동적이고 자기방어적인 노동행위가 맞물리면서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기본건설 부문에서 발생한 몇 가지를 사례를 살펴보자. 다음은 평남 건설 트레스트가 시공한 건설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웅장하게 준공된 3층 시약 공장 건물이 내부의 소소한 공사를 끝내지 않아 조업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지금 같아서는 금년이 다가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화학연구소장의 말이다. “아니, 동무네 공장은 그래도 외형이나마 준공되지 않았소. 글썄 우리 창고 건설은 금년 6월에 완공되도록 국가 계획에 예견됐는데 이제 겨우 기초 공사에 착수했을 따름입니다.” 자재 수급소장이 대꾸한다.⁵³⁾ 이러한 현상은 평남 건설 트레스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만덕 광산의 종업원 주택에 대한 통신원의 보도이다.

만덕 광산 종업원들의 주택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 공업성 기본 건설 관리국 산하 단천 건설 사업소에서는 지난 기간 적지 않은 량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중 많은 주택들을 세워만 놓고 1년이 다가

52) 평남 건설 트레스트에서는 1957년 상반기 계획의 84.2%, 7월의 75.6%, 8월의 70.3%, 9월의 54%만을 달성했다. 『로동신문』 1957년 10월 29일, 2면, “건설에서 질서를 확립하며 조업 개시 기일을 보장하라.”

53) 『로동신문』 1957년 10월 29일, 2면, 앞의 기사 참조.

오도록 암공을 하지 않았다. 어떤 집에서는 천장에서 하늘이 내다보이는
 가 하면 어떤 집에서는 벽짙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집을 지은 다음
 에 천장, 벽 할 것 없이 전혀 재벽을 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
 는가? 그러나 건설 사업소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꿈도 안 꾸다. 하두
 딱해서 광산 일'군들이 독촉하면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 별의 별 구실을 엮어 가며 일을 회피한다. 여름, 겨울 다 안 되면
 대체 공사는 언제가야 마감된단 말인가?⁵⁴⁾

심지어는 거의 다 완성한 주택을 방치한 채로 몇 달을 보내는 현상
 도 일어났다.⁵⁵⁾ '속도창조'의 과정에서 외관만 지어놓고, 내부마감 공
 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관이 완성된 주택의 온돌이 내려앉고,
 주택 내부에 철근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가 하면, 비가 새며, 수도
 등의 위생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화장실이 제 구실을 못했다. 지도부는
 건설관리일군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큰 공사만 우선 끝내놓고 또
 다른 큰 공사에 노동력을 투입함으로써 마지막 마감공사를 마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⁵⁶⁾ 평북 건설 트레스트에서 시공한 묘향산 휴양
 소 역시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⁵⁷⁾ 휴양소 일부에서 비가 새는 것
 을 발견한 휴양소 관리일군이 트레스트 기사장에게 고쳐줄 것을 요구
 했다. 그러나 기사장은 약속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았다. 휴양소 일군

54) 『로동신문』 1957년 3월 5일, 2면, “근로자들의 제의 — 독자들의 편지에서, 언제 가야 공사 마감을 하려는가?”

55) 엄약 광산에서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주민을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로동신문』 1957년 2월 10일, 2면, “<독자들의 편지에서> 주택관리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요구된다.”

56) 『로동신문』 1958년 9월 26일, 2면, “건설된 지 60일이 넘는 주택에 왜 사람이 못 들고 있는가: 평양 제3건설 트레스트 사업에서”; 1957년 10월 29일, 2면, 위의 기사 참조.

57) 『로동신문』 1957년 3월 5일, 2면, “근로자들의 제의 — 독자들의 편지에서.”

이 이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자, 그는 “우리는 책임량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모르오”라고 대답했다. 휴양소 일군은 “건설한 일군들이 그 건설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면 누가 안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⁵⁸⁾ 문제는 건설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건설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창문을 예상하지 않고 벽체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해머질을 해 창문구멍을 낸다거나, 조립식 벽체가 휘어져 맞지 않는 현상이 건설과정에서 비밀비재하게 발생했다.⁵⁹⁾ 이러한 문제는 철도부설에서도 나타났다. 해주-하성 간 광개 철도 부설 공사(1958년 5~8월)는 단적인 예이다.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청년 사회주의건설자’들은 3~4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해주-하성 간 철도 공사를 ‘집단적 혁신운동’으로 일체의 노동력 보충 없이 75일 만에 완수하는 ‘사회주의 기적’을 선보였다.⁶⁰⁾ 그러나 이 노선은 개통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열차운행이 상당 기간 중지되었다.⁶¹⁾

또한 건설현장의 노동규율과 자재의 관리·감독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로동규율과 작업 질서가 문란하여 오작 및 반복 시공이 빈번하여 특히 자재의 보관 관리와 일출고에 대한 제도와 질서는 상상키 힘들만큼 문란해졌다. 단적 실례로 제2사업소는 쉼멘트 150톤을 잘 보관하지 못한 데서 못쓰게 만들었으며 화학 연구소 건물을 비롯한 3개 건설 현장

-
- 58) 『로동신문』 1957년 5월 20일, 2면, “<독자들의 편지에서> 주인다운 태도로 사업하자.”
- 59) 『로동신문』 1963년 7월 18일, 2면, “건설의 질 제고와 부재 문제: 평양종합주택건설사업소에서.”
- 60) 『로동신문』 1958년 8월 12일, 2~3면 참조.
- 61) 조선로동당 출판사, 『교통 운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36~137쪽 참조;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385~386쪽 참조.

에서도 우복 없이 장기간 아적된 석회 80여 톤이 못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관, 관리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자재의 오손, 부패, 변질로 막대한 손실을 국가에 주었다.⁶²⁾

건설현장에서 자재의 부족현상 역시 심각했다. 1960년대 중반, 농촌의 문화주택 건설 역시 건설자재의 부족과 자재수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정권의 해결책은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지방적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이었다.⁶³⁾ 한편, 건재의 부족현상은 자재수송과정에서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철도관리 일꾼들이 화물 취급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송화물이 못쓰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 예로, 평남도 제지 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기름 처리한 종이장판’이 특수화물로 취급받아야 하는데, 일반화물로 취급되어 수송되었다. 이 때문에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아가는 자연발열로 인하여 그중 세 짝이 발화되어 불에 타버렸고, 이튿날 함흥역 구내에 정류 중 런던어 두 짝의 집에 또 불”이 일어났다. 타다 남은 장판지들도 “종이질에 손상을 주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⁶⁴⁾ 또한 수송은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송배차계획을 내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고, 물품을 ‘상하차 작업’ 중에 함부로 다뤄 손상을 입히며, 화물의 도착지를 잘못 기록해 엉뚱한 곳으로 전달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⁶⁵⁾ 이러한 문제들을 시

62) 『로동신문』 1957년 10월 29일, 2면, 위의 기사.

63) 『로동신문』 1962년 7월 19일, 2면,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서의 거대한 예비: 황해남도 연안, 재령, 태탄군들에서의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1962년 7월 2일, 2면, “막혔던 수송 문제를 자체로 풀고 111동의 주택을 완공: 개풍군 농촌건설대에서.”

64) 『로동신문』 1957년 2월 22일, 2면,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자: 독자들의 편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

65) 현장의 철도 일꾼들에게 ‘계획의 달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 과정에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말단 하부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로동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평북도 정주군 내 철도부문에서 무규율적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⁶⁶⁾ 건설현장에 준비된 자재마저도, 관리부서 간 의사소통의 부재와 책임소재 떠밀기로 인해서 현장에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참다못한 현장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제도를 고칠 수는 없습니까? 브록크나 목재가 떨어져 자재부로 가면 생산부엘 가라지요. 생산부엘 가면 지도원이 현장엘 나갔다지요. 그래, 이리저리 찾아다니다나면 하루해가 다 가고 맙니다.”⁶⁷⁾ 자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역시 기본건설을 압박했다.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전략으로, 건설 노동력의 상당수가 생산적 건설에 투입되었다. 이 때문에 비생산적 건설 부문의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건설이 한창이던 평양에서도 주택을 자력으로 건설하는 일이 권장되었다. 자력주택건설은 정부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자재를 싼 값에 공급함으로써 가능했다. 주택건설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해결책은 나름의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⁶⁸⁾ 하지만 앞의 사례들로 미루어, 그렇게 건설된 ‘주택의 질’은 담보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도부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노동자를 대거 총원했지만, 이 역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⁶⁹⁾

서 ‘현실의 수송’은 소외되었다. 『로동신문』 1956년 4월 14일, 3면, “<독자들의 편지에서> 철도 운수 일군들은 봉사성을 높이자.”

66) 『로동신문』 1957년 5월 20일, 2면, “철도 부문에서 무규율성과의 투쟁을 강화하자. 평북도 정주군 내 철도 부문 당 단체 사업에서”; 1958년 12월 13일, 1면, “<사설> 급격히 장성하는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

67) 『로동신문』 1958년 8월 10일, 5면, “어떻게 건설속도를 높였는가?: 평양 제2건설 트레스트에서.”

68) 『로동신문』 1957년 11월 16일, 3면,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

지도부는 노력동원과 함께 후방공급사업의 강화와 군중노선의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동문제를 일상세계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군중노선의 의도는 인민대중의 생활세계에 침투해, 그 안에서 새로운 지배와 종속의 관계망 혹은 연대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망의 형성에서 열성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일종의 진지전의 방식으로, 열성당원은 일상생활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생활세계에서 그녀는 딸 노릇을 하는가 하면, 부부관계의 조연자가 되기도 하고, 언니의 역할을 자임하기도 한다.⁷⁰⁾ 그 과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의 관계가 아닌 사적이면서도 끈끈한 친분관계 혹은 유사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노동주체의 사생활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유사 가족관계의, 연대의 관계망을 종횡으로 엮어내는 전략이다. 이렇게 형성된 소규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당원을 매개로 결합되어, 전 사회적인 관계망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그녀의 부탁과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 후방공급사업을 뒷받침하는 그녀의 노력은 권력이 기대한 당원의 역할이기도 했다. 군중노선과 ‘사람과의 사업’이 의도한 것은, 미시 단위의 열성분자가 일상의 진지전으로 현장의 노동자와 소통하여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만을 완화·돌파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권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건설현장의 문제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비록 현실의 단편적인 일별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공간이 단순히 정권의 의도·계획대로만 건설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간편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지침은 권력의 의지대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애초 계획과 다른 모습이었다. 무리한 계획의

69)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 수기』, 57~61쪽에서 발췌 인용.

70) 위의 책, 66~110쪽 참조.

할당, 제한된 자원, 강요된 자력갱생과 노력동원의 현실에서 일상의 ‘영리한 인민대중’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책에 대응했다. 여기서 인민대중은 현장 관료와 노동자를 포함한 생활세계의 행위자 대부분을 망라한다. 인민대중은 계획이 원하는 속도와 과업에 발맞추어 노동했지만, 정권의 요구처럼 ‘혁명적 노동자’가 되어주지는 않았다. 인민대중은 계획이 할당되면 수행했지만, 무리하게 자신을 혹사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을 최대한 보호했다. 표면적으로 계획은 수행되었고, 권력의 의도는 관철되었다. 권력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계획된 결과를 산출했지만, 그것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계획에 맞추어 건설된 멀쩡한 건물이 사람을 들이지 못하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파국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나의 기획으로서 정권의 의도·계획은 인민대중의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를 거쳐, 비의도적·비계획적인 결과로 전화되었다. 정권은 이러한 인민대중의 일상에 침투하려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투자자원의 부족과 자력갱생의 압박 속에서 전진을 강요받는 인민대중이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정치체계에 열어놓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현재는 ‘인민대중의 생활세계가 정치체계에 진정으로 복속되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제공해 준다. 인민대중의 일상은 정복되지 않는 비의도·비계획의 영역이다. 정권이 기획한 공간 역시 또 하나의 이상향에 불과하다.

5. 맺음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민주기지 구축이라는 정치경제적 기획은 북

한의 공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중공업 중심의 강행적 산업화전략을 쫓아, 생산적 건설은 비생산적 건설보다 우선시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의 기적을 시위라도 하는 듯, 북한 전역에서는 각종 공장과 고층건물이 한시가 바쁘게 들어섰고, 그 경관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했다. 정권의 기획은 현실이 되었고, 손쉽게 성공신화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철도, 주택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희생당했다. 철도는 식민지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전쟁과 분단의 위기 속에서 간과되었다. 하비의 용어를 빌리면, 북한의 공간은 사회간접자본과 소비기금의 희생에 기초한 대규모 고정자본으로 건조되었다. 희생된 건설부문은 투자재원의 부족분만큼을 대중동원에 기초한 자력갱생식 건설로 충당되어야 했다. 그런데 투자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식 대중동원의 성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철도와 주택의 현실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철도는 긴장된 수송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주택은 비약적인 건설의 속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었다. 그 결과 사회적 유통과 노동력의(재)생산을 담당하는 건조환경은 전반적으로 저개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소도시화 현상이 초래한 문제는 대도시 성장 억제, 중소규모 단위공간의 균형발전이라는 테제로 정당화되고 은폐되었다. 인민대중의 생활과 관련된 조악하고 개발되지 못한 공간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사회주의공간의 이데올로기와 공명했다.

생산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건조환경이 저개발된 북한의 공간은 정권이 의도한 기획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의 공간으로,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전쟁의 위기에 대비하는 안보의 공간으로, 정치사회적 관리와 통제가 일상생활을 압박하는 지배

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저개발의 부정적 효과는 정권이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으며 통제되지 않았다. 정권은 생산현장의 하급관료와 인민대중에게 자력갱생과 노력동원의 자원만으로 계획의 양적 달성과 질적 성취를 동시에 요구했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성을 전제했지만, 혁명적 열정은 생활의 피로 속에서 빠르게 식어갔다. 현실에서 생활은 혁명에 우선했다. 현장의 인민대중은 고단한 노동을 최소화하고 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정권의 질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표면적으로 계획은 달성되었지만(물론 계획의 불이행도 많았다), 이렇게 달성된 성과물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고 철도가 부설되었지만, 주거나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기존의 건설된 건물과 철도조차 의도·계획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했다. 정권이 예상한 ‘저개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치달았다.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상생활에서 하급관료와 인민대중의 비의도적·비계획적 행위는 의도·계획된 정책과 마찰했다. 정권과 인민대중의 상반된 실천은 상호작용하여 비의도적·비계획적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계획의 측면에서 일종의 ‘혼란’이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권은 ‘군중노선’ 등의 정책으로 인민대중의 생활세계에 침투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의 도시경관이 보여주는 신화적 외관과 인민대중의 일상이 드러내는 고단한 현실은 사회주의공간(정책)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체제의 성공과 위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접수: 2월 28일 / ■ 채택: 3월 25일

참고문헌

<북한 문헌>

1) 단행본

- 과학원 지리학연구소, 『조선지리지전서: 경제지리』(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김필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탁월한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리명원, 『건설작업반장의 수기』(평양: 민청출판사, 1961).
리화선, 『조선건축사』, 3권(서울: 발언, 1993).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2권(평양, 1970).
조선로동당 출판사, 『교통 운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논문

- 김일성,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 대하여(1953),” 『김일성저작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_____,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인민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62),” 『김일성저작집』, 16권(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_____,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이며 건설에 대한 지도체계를 고칠데 대하여(196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70).
_____,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 『김일성저작집』, 18권(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82).
_____, “당중앙위원회 부서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한 연설(1969),” 『김일성저작집』, 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리중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 실행총화에 대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 1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국내 문헌>

1) 단행본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2).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서울: 한울, 2000).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서울: 보성각, 1998).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96).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의 정치경제학』(서울: 아카넷, 2000).

2) 논문

김왕배, “도시의 자본순환과 건조환경이론,”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의 정치경제학』(서울: 아카넷, 2000).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1964년) - Kaleckian CGE 모델 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전동명, “북한의 체제와 공간의 정치경제(1954~1970)”(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조현식, “북한의 주택현황,” 『월간 북한』, 9월호(북한연구소, 1990).

<국외 문헌>

1) 단행본

황수민 저, 양영균 역, 『린 마을 이야기』(서울: 이산, 2003).

Andrusz, Gregory, Michael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Delisle, Guy, 이승재, 『평양』(서울: 문학세계사, 2004).

Domansky, Boleslaw, *Industrial Control over the Socialist Town: Benevolence or Exploitation*(Connecticut: Praeger, 1997).

Forbes, Dean and Nigel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 Harvey, David, 최병두 역, 『자본의 한계』(서울: 한울, 1995).
- Johnston, R. J., D. Gregory, and D. M. Smith, 한국지리연구회 역, 『현대인문 지리학사전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1986』(한울: 서울, 1992).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Merrifield, Andy, 남청수 외 역,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서울: 시울, 2005).
- Szelenyi, Ivan, *Urban Inequalities under State Socialism*(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Viola, Lynne, ed., *Contending with Stalin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2) 논문

- Enyedi, Gyorgy, “Urbanization under Socialism,” Gregory Andrusz, Michael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 Mingione, Enzo, “The Urban Question in Socialist Developing Countries,” Forbes and Thrift, eds.,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ing*(New York: Blackwell, 1987).
- Szelenyi, Ivan, “Cities under Socialism — and After,” Gregory Andrusz, Michael Haroleand, and Ivan Szelenyi, eds., *Cities After Socialism*(Oxford: Blackwell, 1996).
- Viola, Lynne, “Popular Resistance in the Stalinist 1930s: Soliloquy of a Devil’s Advocate,” Lynne Viola, ed., *Contending with Stalinism*(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Socialist Space Policy and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1954 to mid-1960s

Sun Song Park(Dongguk University)

Dong-Myeong Jeon(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space of North Korea from 1954 to mid-1960s. We defined the “socialist space” of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struggle between “intended/planned policy” of the authority and “unintended/unplanned behaviour” of the people. The socialist government of North Korea thought of socialist space carrying out functions such as production, national security, and ideological domination at the same time, as an ideal type of socialist space. North Korea experienced politico-economic success between the late 1950s and the early 1960s. However, that triumph was just a prelude to the imminent economic crisis. “The space of growth” changed to “the space of crisis.” Built environment, such as railroad and housing, was underdeveloped according to the heavy industry-led growth policy, and in turn, it hindered economic growth. In its implementation, government’s

policy was falsified by the “unplanned/unintended behaviour” of people’s everyday lives. Sometimes lower bureaucrats themselves did not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set up by the authority. Although the policy was planned by the authority, the process of carrying out the policy was not under its control. The process and result of gibon-gunsul(i.e., built environment and fundamental construction) was a typical example. In the domain of railroad and housing construction, “planned/intended policy” and “unplanned/ unintended behaviour” interacted with each other so that the government construction policy concluded with strained transportation and shortage of housing.

Key Words: North Korean domestic policy, socialist space, intended/
planned policy and unintended/unplanned behaviour

박순성

현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부교수로, 프랑스 파리10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폴빛, 2003),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폴빛, 2003), 『북한경제개혁연구』(공편, 후마니타스, 2002) 등이 있다.

전동명

현재 한국정치연구회 북한분과 간사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에 서 “북한의 체제와 공간의 정치경제(1954~1970)”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2005).